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4호
발행일: 2026. 4. 3. (금)
제433회 국회(임시회, 2026. 3. 5. ~ 2026. 4. 2.)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책 이슈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33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2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53건, 3월 19일부터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건으로 모두 55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3회 국회 제1차 ~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대미 전략적투자 추진체계 및 재원 조성 ·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3) 가상자산사업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정책 등 수립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 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한 「공소청법」 제정법률안, (6)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3회 국회의 2026년 3월 12일, 20일,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55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	공소청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정무위원회(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22인
4	교육위원회(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 등 13인
5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등 10인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2인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등 10인
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의원 등 10인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등 11인
1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등 11인
15	외교통일위원회(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6	행정안전위원회(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2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3		한국 4 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등 12인
2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 등 13인
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1인
2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0인
30		선박재활용법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 등 11인
3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 의원 등 15인
3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의원 등 10인
3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의원 등 13인
35	보건복지위원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 등 10인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0인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 등 18인
3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4인
4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8)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42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4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 등 12인
4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등 10인
4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 등 10인
48	국토교통위원회(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 의원 등 13인
49	정보위원회(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위원장
50	성평등가족위원회(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5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5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3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54	기후위기 특별위원회(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55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1)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개요

정부는 2010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위

기 적응대책을 차례로 마련해왔으며, 1차부터 3차 적응 강화대책까지 약 111.7조 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자연재해 등 기후위험이 심화되면서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졌고,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후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기후정책의 패러다임을 감축 중심에서 적응, 형평성, 참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기후위기를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기후복지' 개념을 제도화하였습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내 기후대응 보증계정 설치를 통해 정책금융의 공급이 확대되면 녹색건축, 기후적응 인프라, 기후데이터 및 리스크 관리 산업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 · 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 · 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분석 · 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6-03-12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환경부)

□ **과제목표**

○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 평가까지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 **기후위험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및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

□ **주요내용**

○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해상도 한반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천리안 5호) 개발·발사, 1개월~10년까지 예측하는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 (**기후위험 영향 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경제의 기후위험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 (**국가 인프라 대전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설계기준 강화·보강

○ (**도시 기후 탄력성 제고**)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 (**경제 적응력 강화**) 산업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반도체 초순수** 공급체계 구축

○ (**사회 적응력 강화**) 온열·한랭질환 감시 및 건강영향평가, AI 감염병 스마트 감시 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

○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정립**)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까지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5 정부 업무보고(환경부, 2025. 1. 10.)

1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 · 안전」

❶ 새로 짜는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기후물가)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 61개 지자체 열차단 페인트 도장, 야외 근로자 쉼터, 벽면 녹화 등 설치 지원('25, 95억원)

▪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 지역별 농산물 재배·어획변화 및 기후위험 예측정보 제공 → 대응지침 및 적응사업 발굴 지원

○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보도자료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극 적응대책(관계부처 합동, 2025. 12. 22.)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참고 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선교 의원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2025. 9.
이소영 의원안: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등 2025. 9.
강득구 의원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2024. 11., 2025. 9.
서왕진 의원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2025. 9., 2024. 11.
이훈기 의원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2024. 9., 2025. 9.

기후위기 물 재난 · 생물다양성 · 식량위기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댐 · 하천 등 국가 기반시설 혁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2022. 12. 30.

□ 인간의 활동으로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처해 있음
- 기후변화는 예측된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행동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 · 한파에 약한 생물학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자 등임
- 기후변화는 생물학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 폭염 ·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 대책이 부족함
- 현행 법률에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뿐이며 국가적응대책에는 폭염 ·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 폭염 · 한파 적응 대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 · 보완 등이 필요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폭염 · 한파 위험지도 구축이 필요하고, 법적 정비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 · 보완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적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4. 12. 3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기후위기 적응법(가칭) 추진 근거 마련
- 기후위기 적응법(가칭) 법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마련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